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일 (제358회)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년 9월 일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년 9월 일

발 의 자 : 행정문화위원장

1. 주 문

○ 2017년 7월 청주 폭우 피해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순직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2017년 7월 청주 폭우 피해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순직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인권위에서도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가치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분의 차이보다는 공무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순직을 인정해야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음.

○ 지난 세월호 참사 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는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한바 있고, 기간제 교사는 순직 처리되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지난 7월 16일 청주지역의 폭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제2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복구 작업을 하다 생을 마감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이었던 고 박종철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힘든 도로보수 작업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ROTC 군인을 꿈꾸는 외동딸의 힘든 뒷바라지에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16일, 그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까지 장장 14시간을 폭우로 파손 된 도로복구 작업을 하고 차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때 공무원은 순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가치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분의 차이보다는 공무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순직을 인정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금년 4월 13일에도 정부에 세월호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공무 수행 중 사망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해야 함이 당연하다는 방침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호우 피해 복구작업 시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 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은 당연시 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순직 인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차별을 철폐하고 업무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순직 인정범위 개정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즉각 공무수행 중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순직을 인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순직처리 관련 법규를 적극 개정하라!

2017년 9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